

민주 “尹정부 소상공인 정책 실종”…대안논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우리경제 87% 차지 주역들” “尹정부, 이들 위한 뚜렷한 대책 내놓지 않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실종됐다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민생단) 코로나지원팀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바로잡기’ 토론회를 열었다.

코로나지원팀장인 이학영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7%가 소상공인 업체이고, 종사자는 700만에 달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주역임에도 이분들이 처한 현실을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화한 가운데 원재료비, 임대료 등 모든 비용의 상승으로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국내 자영업자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무려 1000조 원에 달하고 코로나19 사태를 거친 2년 사이 자영업자들이 새로 받은 대출만 3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어 “국제 이슈로 야기된 지금의 고물가·고금리 상황은 과거와 같은 지원책으로 이겨낼 수 없다.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 서영국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신 당시의 공약 상당수를 번복하기까지 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과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

적했다.

차기 당권에 도전한 이재명 후보는 측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하며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에 국민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위기는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다. ‘민생 정치’의 실현은커녕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응책이나 책임자가 부재하다”며 “국가 담당 역할을 대신 감내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상응하는 보전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함에도 부자감세, 지역화폐 예산삭감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시행하며 무능, 무책임, 무기력 등 3무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선 국회가 최근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했고 가동 예정인데 그동안 민주당 민생단이 두 달 넘게 현장을 다니다고 또 들은 내용을 갖고 7대 민생 입법을 시작했다. 그걸 중심으로 민생특위에서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민생특위 의제가 여야 합의에 의해 정리된 게 있고 간사간 합의하면 추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번 추경에서 합의하면서 몇 가지 요구에 관철된 게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이 가능하게끔 예산을 추가했다. 가장 많이 관심 가졌던 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관련 사업인데 그중 하나가 새출발 기금이다. 소위 ‘시드머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을 밟았다.

다만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지원팀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소상공인 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바로잡기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나 정국을 거치며 힘들어서 받았던 대출금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의 종료로 선언했는데 이 부분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하게 성토했고 바로 잡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희영 박사는 “제가 최근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보고 있다. 경제 방향, 재정 전략 회의, 긴급금융지원, 세계 개편안 등을 보면 이게 무슨 정책인지 이해되지 않았다”며 “오로지 부자, 대기업, 재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꼬집었다.

위 박사는 “또 법인세, 부동산세 인하 등 세계 개편안을 보면 엄청 획기적인 일을 한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때 법인세를 22%에서 28%로 올리려 했다. 하지만 여당 반대로 26%까지만 올렸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야당이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야당”이라고 강조했다.

위 박사는 퍼펙트 스톱(복합위기)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소비자물가 급등은 민간소비저출 감소 등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강력한 긴축재정은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현 시점은 기대 인플레이션 억제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10% 예산 지원으로 민간소비저출유지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이 유지가 되어야 향후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기재부의 예산 삭감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플랫폼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결국 경제적 감자들 중심으로 불공정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고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주체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며 불공정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후환경변화(ESG) 문제가 국제적 화두로 떠오른 만큼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합리적, 효율적 지원을 해야 하고, 대기업과의 상생 구조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승호기자



안 국당 몫 최고위원 선임에 “늦었지만 국민과 약속 지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당 지도부가 국민의당 몫으로 추천한 최고위원 2인을 선임한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늦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화답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3차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도 그렇고 지도부도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신의를 보여주시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최고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오는 28일 개최 최고위 회의에서 공식 의결하고, 이후 전국위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을 마치고 안 의원이 추천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장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의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인선이 ‘이준석 지우기’로 인식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질문을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이 대표와 한 약속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준석 대표는 앞서 안 의원이 합당 과정에서 추천한 두 최고위원의 선임에 반대해 왔다.

안 의원은 또 이날 토론회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이고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김 전 지사 사면 건만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반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찰이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경우는 없다. 모두 어느 정도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며 “예전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암암리에 뒷면에서 통제했다면, 이번에는 투명하게 운영하는 과정을 체계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급증 추세에 따른 정부 대처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전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실감하고 체감하게 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질병관리청장이 방역 사령관이라고 지정하고, 전폭 지원하면 그것이 과학방역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제안했다.

최이슬기자

김정희 도의원, 전남형 공공간호사제 도입 주장

“공공의료 간호인력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촉구”

전남도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의 간호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남형 공공간호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최근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의 업무

보고에 이어 진행된 전남도 보건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에 앞서 “양 의료원의 의사와 간호사 이직률이 높는데 항상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구하기도 힘들다고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가 도내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의료원에서 5년 정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복지 측면이나 양 의료원의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와 취약지역 의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며, “전남도가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강진의료원은 간호직 정원 76명 대비 11명, 순천의료원은 정원 117명 대비 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